

# Hansun Brief

발행일: 2018년 2월 19일(통권51호) / 발행인: 박재완 / 발행처: 한반도선진화재단 / 서울 중구 퇴계로 197, 407호 / 전화: 02-2275-8391 / email: hansun@hansun.org / www.hansun.org 

## 시급한 국민생산성 혁신운동

김도형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획홍보위원장, 한림대학교 교수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 요약

대한민국 산업화의 성공은 국민, 기업, 정부가 3위1체가 되어 이루어낸 성과였다. 1960년 대 이후 한국은 고속성장국가였지만 공정한 분배 성과도 양호한 유일한 개도국성장모델이었고 세계은행도 이를 인정했다. 1987년 체제 이행으로 기존의 국가주의적 체제 청산이 지연되고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만연하기 시작했다. 산업화에 이어 민주화를 달성했다는 자부심이 넘치면서 이것이 혁신의 길을 가로 막는 동인으로 작용했다.

위기가 기회라지만 현재의 위기는 쉽게 탈출할 수 없는 다중위기이다. 정부 출범 1년이 가까워 오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안보 등 거의 모든 국정 이슈마다 국론분열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합하고 경제발전을 유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먼저 대선당시 비전과 공약에 대한 과도한 이념적 집착을 버리고 생산성운동을 비롯한 혁신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 생산성운동의 기본목표는 일본과 미국의 절반수준도 안 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자원의 이동과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낙오되는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메워가면서 자영업자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생산성3원칙(성장성, 민주성, 공정성)을 기반으로 사업장의 협조적 노사관계를 정상화시키고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에 맞추어 기존의 사회보장과 조세제도가 자기부담(自助), 보험료부담(共助), 조세(公助)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개혁하고 교육, 의료, 건강, 복지분야는 제조업과의 융합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스마트 성장 전략의 주력업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미래 불확실성은 리스크로 전환시켜야 관리 가능하며, 이럴 때 만이 전국민이 생산성 혁신에 몰두할 수 있다.

1960~70년대 산업화 역군들은 생산성향상 운동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주로 미국과 일본을 자주 찾았다. 그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한국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고려하세요'라는 충고를 들었다. 이런 충고로 초기 생산성운동은 새마을 운동의 의식운동으로 변용되어 경제개발에 적용되었다. 2차 대전 후 신흥독립국 초유의 압축성장인 한강의 기적 -산업화- 은 리더의 개발 의지, 경제개발5개년계획이라는 제도와 잘살아보자는 새마을 공동체 의식이 결합된 3요소의 성과였다. 단순히 개발국가 주도의 빠른 추격자(Fast-Follower) 모델이 아니었다. 한국은 고속성장국가였지만 공정한 분배 성과도 양호한 유일한 개도국성장모델이었음을 세계은행이 인정할 정도였다.

1980년대 초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국가의 'Look East'의 대상은 일본이 아니라 우리의 생산성운동을 배우겠다는 것이었다. 1980년대 초중반 국내안정화정책과 대외의 3저 효과로 외형성장이 가능했다. 그러나 1987년 체제 이행으로 기존의 국가주의적 체제 청산은 지연되고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만연하기 시작했다. 산업화에 이어 민주화를 달성했다는 자부심이 넘쳐 오만(傲慢)이 새로운 길을 가로 막았다. 민주화에 상응한 물질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압축성장과 민주화의 자만이 혁신의 길 막아**

1996년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이 되었다. 하지만 산업화시대의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 IT 혁명과 글로벌리즘에 걸맞게 법·제도관행을 개혁하고 국민적 생산성혁신을 통해 제3차 산업혁명을 주도하지 못했다. 1996년 세계최초로 CDMA 기반

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상용화했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내놓을 만한 글로벌 기업의 씨앗을 뿌리지 못했다. 같은 해 방한한 폴 크루그만(Paul Krugman) 교수로부터 지나친 양적성장의 위험성에 대한 뼈아픈 지적을 받아야만 했고, 결국 2007년 12월 외환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 국제금융 기구 등의 외압에 의한 대대적 구조조정이 있었지만 구시대의 적대적 노사갈등, 공적규제, 경쟁업체 진입을 가로 막는 소위 3대 규제 등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

다행히 우리경제는 2010년을 지나면서 미국과 일본의 경쟁력약화와 생산·소비기저로서 중국의 등장으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연결되어 세계적 금융위기를 넘고 외형성장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규제의 대못을 뽑지 못하고 원화환율 인상 등 경기부양에 연연함으로써 생산성혁신의 기회를 무산시켰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가시적 경제영역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합한 각종 개혁은 지체되었다.

특히 기득권 세력은 대내개방을 가로 막고 기득권 보호에 주력했다. 이미 기득권을 형성한 기존기업과 대기업노조가 지대추구행위를 일삼으며 내수시장을 위축시켰다. 이로 인해 수많은 중소기업은 과당경쟁과 수익저조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당경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비기업이 존재하고 있음은 정부의 각종 보조금 지원과 규제의 산물이다. 한계기업은 퇴출의 자유마저 빼앗기고 기득권기업은 기술혁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결국 일자리 증가, 격차축소, 양질의 고용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성장물마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15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에 따르면 잠

재성장률은 3%수준이지만 15년 후면 취업자 기여도는 마이너스로, 자본기여도도 바닥으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성장패턴이 효율주도에서 간신히 혁신주도로 전환은 했지만 각종 고비용·비효율로 인해 고기술 → 고생산성 → 고임금의 선순환의 사다리를 타지 못하고 있다.

### 보수정권 9년, 고비용·저효율 구조 개혁 못해

지난 보수우파 정권 집권 9년 동안 구조적인 고비용·저효율 구조는 각종 졸속, 낙장, 땀질식 정책으로 실패를 반복했다. 여기에 기존 정치권의 퇴행적인 이익주도 정당정치와 선심성 포퓰리즘 확산이 정책실패를 가중시켰다. 미래증세를 염두에 두고 지출을 줄이려 하는 가계와 기업의 합리적 선택 앞에서 정부는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다. 시장을 이기는 장사 없다. 드디어 대통령탄핵사태는 자유, 시장, 법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보수우파의 가치체계와 역사적 유산마저 부정당하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보수우파는 생산성 향상에만 올 인한 나머지 격차 확대의 배경과 처방에는 무관심했다. 자본은 비숙련노동보다는 숙련노동과 보완성이 높다. 따라서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간의 생산성과 임금격차는 불가피하다는 논점을 분명히 하면서 한편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상생의 토대를 함께 만들어야 했다.

아텐만의 영웅 이국종 교수가 공동경비구역을 넘어 다 만신창이가 된 20대 북한병사의 생명을 구하고 우리사회에 다시 한 번 빛과 소금을 선사했다. 이 교수가 의식을 회복한 그에게 '열심히 해서 세금 내라'고 건넨 평이한 한 마디는 최근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가장 명료하게 전달한 메시지였다. 특히 보수우파의 사전에는 생산성혁신이라는 용어조차 찾기 힘들고 지켜야 할 가치 즉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잊고 있는 상태에서 큰 울림이었다.

자금 우리 경제는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현 정권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강하지만 전례없는 내우외환

의 위기 앞에 놓여 있다. 1980년대 중반의 3저와는 달리 30년이 지난 지금 3고(원화강세, 고금리, 고유가)와 인구절벽이 임박했다. 진퇴양난의 벼랑 끝이다. 아무리 위기가 기회라지만 현재의 위기는 쉽게 탈출할 수 없는 다중위기이다. 정부 출범 1년이 가까워 오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안보 등 거의 모든 국정 이슈마다 국론분열은 극으로 치달는다. 소통을 무기로 자조(自助), 공조(共助), 공조(公助)의 3자가 조화된 새로운 시스템으로 생산성혁신을 주도하는 것이 진정한 최고 국민관의 역할이 아닌가?

첫째, 전대미문의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대선 당시 비전과 공약에 대한 과도한 이념적 집착을 버려야 한다. 아무리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저출산·고령화와 제4차 산업혁명 진행과 같은 전례 없는 대내외 정책 환경과 맞지 않으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라도 기업과 국민다수의 기대 변화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 동일한 금액의 재원을 가계와 기업에 투입했을 때 어느 쪽의 고용유발효과가 큰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지 않은가? 한국회의 본사와 현장이 함께 2류로 추락해서는 안 된다. '본사도 일류-현장도 일류'가 되는 날을 보고 싶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기업이 주체가 된 투자 → 일자리 → 소득 → 소비의 선순환을 위해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스마트 성장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왜 올바른 길을 두고 돌아가려는가? 최근 혁신성장이 새로운 전략 축으로 추가되고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개혁을 서두르고 있어 실낱같은 희망을 걸어 본다.

### 공약이행보다 상황에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

둘째, 늦었지만 기업의 어려움에 좀 더 귀 기울여야 한다. 일손이 부족할 정도로 경기가 활황세를 이어가는 일본의 아베정부는 동일본대지진이라는 국가재난 극복과 6중고(엔화강세, 높은 법인세율, 경직된 노동시장, 뒤쳐진 FTA망, 다량의 CO2 감축, 비싼 전기료와 불안한 전력사정)를 해결하라는 재계의 시정 요구를 한손에, 미일동맹을 다른 손에 잡고 출범했다. 5

년이 지난 지금 재계가 겨우 임금3% 인상안으로 생색을 내려하고 있다. 내부유보가 엄청난 상황에서도 말이다. 일본기업을 비웃던 우리가 이제는 6중고를 견뎌내야 한다. 급속한 최저임금인상과 노동시간단축, 법인세 인상, 비정규직 제로, 탈원전에 따른 전력요금 인상, FTA 재협상도 들어가기 전에 밀려오는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미국의 무역규제조치 남발 등 동시다발적으로 경쟁력을 훼손시키는 양상들이 밀려오고 있다. 또한 글로벌 표준을 벗어난 과도한 국가개입과 전광석화(電光石火)식 정책실험도 우리기업이 직면한 고통이다.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과 기술사양이 급변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신속한 적기의 신규투자야말로 생존조건이다. 설비연한이 늘어나면 생산성은 급락하고 일자리는 축소된다. 그러나 지금은 기업들은 투자할 때가 아니라고 믿고 있다. 금융세계 우대조치보다 정책의 일관성, 장기거래처와 양질의 인력확보를 선호하는 외국인 기업 진출과 해외진출기업의 유턴도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요구를 경청해야 한다.

셋째, 수출과 고용창출의 버팀목인 자동차산업(자동차용 엔진 및 부품품 포함)의 수출액과 물량이 함께 감소하고 일부 업체의 공장폐쇄가 임박했다. 이 사태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작년 4/4 분기 수출물량은 급감하고 대신 수입물량은 2/4분기까지 주춤하다가 다시 회복, 수출물량의 2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산업의 수출은 물론 국내시장에서도 외국산에 밀리면서 생존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자동차엔진, 부품품과 부품관련 하청 계열 협력업체로 구성되는 기업생태계가 무너지고, 일부 대기업의 소위 R&D 센터마저 해외진출이 가속화된다. 자동차는 AI로 대체가능한 단순한 모듈기술이 아니다. 현장근로자의 오랜 숙련과 기능이 다면적으로 조율되어야 비로소 기능을 발휘하는 작품이다. OECD가맹국 최고수준의 임금(원화강세에 따라 달러표시 임금은 더욱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생산현장의 생산성은 경쟁국 대비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근로자의 숙

련도와 작업몰입도가 낮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업 리스트럭처링을 지연시켜 원가는 물론 제품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못한 노사의 뼈아픈 자성이 요청된다. 그렇다고 조선 해운의 운명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조선이나 해운업을 지속해야 하는가? 경쟁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퇴출되어야 한다.' 식으로 수수방관한 지난 정권의 정책실패를 거듭할까 심히 우려된다. 강성노조가 버티고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 일상적인 리스트럭처링을 지속하는 하청 계열 협력기업은 2차부실로 인해 내수위축이 불가피하다. 고용친화적인 전략적 공공투자와 중소·영세기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지원 등 신속적 경기부양으로 생산성급락을 막아야 한다. 며칠 전 고속도로 시운전을 끝낸 자율주행차가 수출시장에 투입될 때까지 재정을 투입한다고 누구도 나무랄 수 없다. 그러나 기존 특정산업중심의 산업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는 거의 반영구적인 연구개발세액공제 등 기업 및 산업의 횡단적 전략적 지원으로 선회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벤처,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기술융합을 촉진하고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현재 대기업은 우수한 기술벤처기업 M&A를 통해 상생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청년고용승계와 같은 전대미문의 규제를 가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미 양대 경영지침(저성과자를 포함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변경 지침)은 작년에 이미 폐기처분했지만 차체에 국회 안에 여야 정책협의회를 신설하여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라도 조기 통과시켜야 한다. 생산성운동의 기본목표는 일본과 미국의 절반수준도 안 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자원의 이동과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낙오되는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메워가면서 자영업자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저생산성 저임 일자리를 보호할수록 그 대가는 생산성이 높은 업종이 치러야 한다. 이것이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범국민 범부처 생산성 혁신운동이 필요한 이유이다.

### 생산성 혁신 3원칙에 주목하자

넷째, 현장중시의 협조적 노사관계의 프레임을 구축해야 한다. 일부 노조는 생산성운동이라는 말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심지어 극열투쟁을 불사할 기세다. 현장 노사는 노사정 위원회나 산별노조 등 상급단체만 바라볼 뿐 무기력하다 못해 극단적 투쟁만 선택하고 있다. 일견 일리가 있다. 생산성 배분에 관한 기본원칙에 합의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생산성 3원칙을 제안한다. 즉 ① 성장성 원칙(통상적 생산라인 교체, 직무로테이션, 공장의 해외이전 등 주요 경영방침 변경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진행), ② 민주성 원칙(해고사유가 발생할 경우 노사협의회를 통해 협의 진행), ③ 공평성 원칙(생산성 성과는 노사와 함께 소비자에게도 환원)이 그것이다. 업종별 규모별 차이는 있겠지만 노사 간 이해가 대립하는 단체교섭의 장이 아니고 상생협력의 노사협의회를 장을 가동하여 극단적 투쟁을 피하면서 기업공동체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

다섯째, 국민생산성 혁신운동의 주역은 기업의 핵심종업원이어야 한다. 그런데 기업의 거버넌스가 무너지고 있다. 서구에서 이식된 우리 회사법은 분명히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에 의한 거버넌스와 함께 대리인인 경영자는 이윤극대화를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주주자본주의가 기본이다. 그러나 시장경제 시스템으로서의 기업의 자본논리가 지속하려면 이해관계자 간 대립을 끊임없이 조정하는 핵심종업원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는 노조간부를 포함한 핵심 종업원 위상이 정립되지 않은 채 기업 거버넌스가 취약하고 이는 오너 독단경영의 폐해에도 무력하다. 핵심 종업원은 기업 내 교육훈련과 승진승급을 통한 고도 숙련노동력으로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의 질적 성장을 담보하는 기업 내 인적 자본이다. 이러한 종업원 주권이 기업시스템의 근간을 이룰 때 비로소 주주주권과 공유 경제도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디지털 경영에 접근할수록 핵심

종업원 주권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 혁신운동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

여섯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각종규제를 철폐하여 실질임금 상승률은 실질생산성증가율에 맞추고 소득분배율도 안정시키고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막아야 한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정부의 임금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경제정책이 당초 정책목표와는 현격한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시장의 힘인가 생각하니 씁쓸하기만 하다. 현재 우리 제조업의 단위노동비용(시간당 명목 임금/실질노동생산성)이 2014년 4/4분기 ~ 2017년 1/4분기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나 2/4분기 급등했다. 바로 과감한 제도혁신이 없는 한 제조업경쟁력 하락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이제는 시도별 최저임금위원회로 하여금 해당지역 경제의 거시상황과 개별산업과 기업의 지불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하고 임금교섭도 기업 내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 지방분권을 외치고 있지 않은가. 시도별 업종별 생산성 정도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폭을 달리하고 산정범위도 기본급 외 정기상여금과 숙식수당을 포함해야 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와 경기자극,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통한 격차해소 등 긍정적 효과보다는 중소기업의 도산 등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지 않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13조 원의 정부지원이 모자라 임대료와 카드수수료율 인하라는 땀질 처방이 나오기도 했다. 사전에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을 의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기에 충분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은 지역의 성장분야 진출을 가로막는 제도 등 규제개혁, 스마트 기술개발과 빅데이터 활용 지원, 해외로부터 유턴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 나아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거래 감시 등이다. 경제부처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를 들고 시장을 배회하는 시간에 이런

시책에 몰두할 때다. 물론 기업 스스로 저임금·다취업의 온실 아래 지대추구만 일삼는 행위에서 탈피,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과감한 기술혁신과 경영개혁에 나서야 한다.

**급격한 최저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일정 조정해야 잠재성장률 하락 막아**

16시간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30인 미만 중소기업은 노사 자율합의에 의하여 주당 최대 8시간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장 목소리가 설득력 있다. 노동시간을 일거에 단축하면 종업원 잔업수당이 줄어들어 소득은 오히려 줄어든다. 이로 인해 급격한 소비감축이 우려된다. 이러한 예상치 않던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고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맞게 스마트전략을 선도하면서 양극화라고 하는 사회적문제군을 해결하려면 노사가 자율합의에 나서야 한다. 고용안정과 노동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교섭능력과 합당한 환경정비는 중앙정부의 몫이다. 서둘러야 한다.

피용자보수/요소소득 비율은 여전히 60%대 전반을 맴돌지만 경기확대기에는 요소소득비율의 증가속도가 피용자보수에 비해 빠르게 증가함으로 당연히 소득분배는 악화된다. 반면 불황기에는 이 비율이 개선되는 등 반복을 거듭하고 있다. 물가안정기 명목임금 인상율은 당연히 실질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물가상승률을 추가함으로써 그나마 소득분배율을 안정시켜 왔다. 그러나 앞으로 원화가 강세가 되면 실질임금을 실질노동생산성과 일치시키더라도 소득분배율은 더욱 악화된다. 2010년 3/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국면에 있는 교역조건 개선 분만큼 실질임금인상을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 규제개혁이 선행하고 급격한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일정을 조정하면 소득분배율도 안정되고 잠재성장률 하락도 막을 수 있다.

**생애편익과 생애부담이 분명해야 닫힌 지갑 열리고 생산성 혁신도 가능**

일급제, 사회보장을 지속하려면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인구절벽에 맞서 생산성을 올리지 않으면 GDP와 잠재성장률은 하락하게 되어 있다. 거역할 수 없다. 노동투입량(취업자 수x고용시간)을 늘리려고 청년일자리, 여성과 고령자 취업, 출산율을 회복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잠재 성장률을 결정적으로 높이기엔 역부족이다. 노동시간 단축에 나서면 잠재노동투입량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당분간 1인당 자본집약도를 높이는데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하며 기업이 그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인구보너스 시대에는 생산성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물적 투입으로 양적성장이 가능했고 복지제도 운영도 용이했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그들의 생산성혁신이 남은 유일한 길이다. 이제 한세대만 지나면 자식 1명이 두 분 부모님을 30년간 수발해야 한다. 노노(老老)갈등이 두렵다. 현역세대는 자신의 노후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과증될 것이며, 그 부담을 국채상환으로 안게 될 차세대는 '아동학대(兒童虐待)' 혹은 '노해(老害)'에 대해 항변조차도 못할 것이다. 이는 기성세대가 다수결 대의민주주의를 전횡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합법적인 대의민주주의 결함과 세대 간 격차를 방지한 채 우리는 정의를 논할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고령자 취업기회 확대, 복지전달체계의 합리화 등을 통해 생애편익과 생애부담 간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나아가 의료비가 급증하는 75세 이상의 노인세대는 현행 건강보험에서 과감하게 분리하여 노인의료보험으로 별도 운영하고 영육아 보육과 청소년교육을 위한 아동보험 신설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실부문을 함께 안고 갈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사회 주역인 현재의 중장년세대는 '증세없는 복지없다'라는 구호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세수가 안정되고 의료보험료와 비교하더라도 역진성이 심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기초연금(혹은 최저보장연금)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국민적 합의를 얻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

를 위해 국민개인구좌도 만들어 적어도 '내가 낸 보험료는 얼마 후 얼마가 되어 되돌아오는 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중장기에 걸친 공조(公助)체계가 구축되면 과잉민주주의와 이에 편승한 선심성 포퓰리즘에 빠져들기 시작한 일부 국민들의 자조(自助)의식이 되살아나고 공조(共助)의 보험기능도 강화될 것이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에 맞추어 자기부담(自助), 보험료부담(共助), 조세(公助)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급여는 거시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자동 조절되도록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조세개혁은 함께 가야 한다. 유망성장분야인 교육, 의료 건강 복지분야 생산성 혁신은 제조업과의 융합을 통해서 경제사회시스템의 지속가능성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이에 대한 결심이 서지 않는다면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완전 철폐한 재원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검토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해당부처로 하여금 새로운 정책메뉴와 함께 적어도 4인 가족을 대상으로 그 정책이 가져올 예상수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했으면 한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분야별 기술개발전략과 규제개혁도 반드시 실행(Implementation)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비용과 효과가 가감없이 공지되고 진행과정이 추적되어야 한다. 잦은 정책실패를 줄여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함이다. 미래는 불확실한데 공동체 내부의 신뢰기반이 무너지고 강한 주인의식마저 없으면 생산성 혁신운동은 공염불에 그치고 한낱 적폐로 기록될 뿐이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 문자후원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